

“완주·전주 통합, 상생의 선택”

김관영 도지사, 민주 전북 국회의원 3명 “행정 통합 추진” 결단에 환영 입장 밝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성장형 통합”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정동영·안호영·이성운 의원이 결단을 내려주시고 김윤덕 의원께서도 전격적으로 뜻을 모아주신 데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대해 김 지사는 “국가 5극 3북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려주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이번 통합 논의가 “완주가 약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완주가 더 강해지는 상생의 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완주와 전주가 각각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하고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규모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닌 전북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의 경쟁력을 키우고 균형발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며 “도는 지역 정치권과 원팀이 되어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광역 통합에 준하는 파격적인 국가 지원 방안 마련 △완주와 전주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실질적인 상생 정책 추진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구체적인

인 약속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제정, 산업, 교통, 정주 여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번 통합은 완주와 전주, 나아가 전북 전체가 함

께 성장하는 기회”라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뜻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속에서 모아질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며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됐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이번 정치권의 합의와 전북도의 적극적인 역할 선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전북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힘을 모으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 미래 우선한 판단 행정 통합 논의에 진전”

민주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완주·전주 통합 찬성에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2일 발표한 민주당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 통합추진 입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주변부가 아닌 주도적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깊은 환영과 존경의 뜻을 표하고 전북 전체의 미래를 우선한 정치적 판단이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도 감사하며 세 분의 책임 있는 뒷받침이 통합 논의를 실행 단계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그동안 저는 전북이 외부 투자와 중앙 의존에 기반 성장 전략의 한계를 넘어 내발적 성장과 균형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주·완주 통합은 그 전환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전북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재편되고 행정·산업·인구·재정의 분산 구

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북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실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5극 수준에 상응하는 정책 패키지와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은 단일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독자적 특화지역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범대가 될 뿐더러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은 3북 가운데 첫 기초자치체 간 통합이자, 중추도시 조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북 도민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응답과 국가 차원의 발전 방향 제시를 기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북 타운홀미팅을 조속히 개최하고 통합 이후 전북의 역할과 국가 지원 방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전주·완주 통합을 계기로 전북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전략 거점으로 거듭나야 하며 재생에너지·피지컬 AI·농생명바이오·K-컬처를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전북이 국가 발전 전략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을 전북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더 강력한 전북, 스스로 성장하는 전북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강동화 도의원 건의... 제헌절 공휴일 부활법 국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이 지난해 7월 제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건의한 헌법 개정안, 다시 국민의 휴일! 제헌절 공휴일 제정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리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입법으로 실질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입법 성과는 중앙 정치권의 단독 성과라기보다, 지방의회가 헌법 가치와 국가 정체성이라는 거시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국회가 제도화한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동화 의원의 건의안은 단순한 선안적 결의가 아니라, 제헌절의 역사적·교육적·국제적 비교 논거가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서난이 도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제24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이재명 국민권선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는 노동계에서도 환영할 만큼 매우 의미 있고 진보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2일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25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모 접수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나 달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주거·시설,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매출증가의 경제적

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그간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주로 교통 및 방재 분야 (60%)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디지털 행정, 고령화 및 보건복지 수요 증가 등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및 보건·의료·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설정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혁신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공모분야 이외에도 스마

트도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시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서비스라면 기타 분야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순위를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는 사업비 적정성 검토와 국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dl.go.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ac.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박주홍 진안 도의원 후보의 결심 “정치, 약한 곳부터 살피는 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사가 분주했던 지난 31일,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사무실 안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접수 서류를 보완하려는 예비후보들과 이를 확인하는 당직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전북 진안지역 도의원 후보로 다시 도전에 나선 박주홍 전 정전 별정 우체국장이었다. 박 후보에게 이번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지난 민선 8기 도의원 선거에서 단 몇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좌절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고향 진안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박주홍 후보는 도의원의 역할을 ‘군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이라고 표현한다. 진안군과 전북자치도, 지역과 도민을 잇는 다리라는 뜻이다.

그는 “진안에는 용담댐이 있고 그 물을 전북 도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며 “진안군민이 감내해 온 불편과 희생을 도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안 지역의 목소리를 도정으로 전달하고, 도의 정책을 다시 지역으로 풀어내는 일, 그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는 것이다. 그가 정치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박 후보는 “정치에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박 후보는 “정치는 가치의 배분”이라고 말한다. 한평생 자원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쓰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는다. “우리 세대는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지만, 다음 세대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했다. 답은 “제대로 된 정치”였다. 지역과 함께 숨 쉬고 약한 곳부터 살피는 정치 말이다.

박 후보는 끝으로 “정치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다. 겸손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듣고, 묵묵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5극보다 유리한 지위·특례 필요”

민주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준병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북 체제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소외되는 안 된다며, “전북을 포함한 3북에는 5극보다 더 유리하고 강력한 지위와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극·3북 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대전환”이라며 “최근 광역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이미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갖춘 5극에 정책과 재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제주·강원 등 3북은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밀리며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적 형평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3북은 5극보다 높은 법적 지위와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북의 발전 전략으로 △미래에너지·합단산업 국가전략거점 육성 △농생명산업 권한 대폭 이양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약 △의료·복지·문화 등 정주 인프라 확충 △조직·재정·규제 권한 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권 완성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분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통해 무너진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이 5극보다 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주지역 도의원 “안호영 의원 행정 통합 찬성 입장 환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지역 도의원 12명이 안호영 국회의원의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난이 대변인 명의로 2일 발표된 논평에서 전주지역 도의원들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밝힌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대한 결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100년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완주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안호영 의원의 찬성 입장 표명을 계기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